

## 조달청, 300억대 시설공사 입찰

조달청(청장 박춘섭)이 7일 삼척 도계 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00억원대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공사 입찰은 삼척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약사분구 우·오수분류화 사업이며 모두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관호

# 건설기능인 등급제 '대변화' 몰고 온다

월요기획 ZOOM >> 6·7면

2019년 국토교통부가 법제화를 예고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내년부터 LH 사업현장에서 '건설품질명장제'란 이름으로 먼저 시행된다. 국토부는 LH가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을 소지한 기능인을 고용한 건설사에는 종합심사 및 적격심사나찰제에서 입찰 가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전문건설업이다.

LH는 3월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전신인 '건설품질명장제'의 내년 시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2월 중에 건설기능인의 현장 성과물을 바탕으로 기능 등급을 분류하는 '기능인 등급제 평가표'를 완성할 계획이다.

〈건설경제〉가 단독 입수한 평가표에 따르면 공종별로 작업성과 측정 항목은 50여개 내외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하자 신고가 많았던 항목에 높은 배점이 부과됐다.

등급은 총 4등급제다.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나뉘며, 겸업 기능인은 준초급으로 분류된다.

현재는 경력 중심으로 등급이 분류되지만, LH의 작업성과에 따른 등급제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력과 자격증 합산 기준이 접목된 전망이다. 등급제 도입과 기능인 대상 교육 확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문건설업계는 당장 업등록 요건에서 시공능력 평가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장·방수·조적공사의 경우 현행 업등록 요건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보유'에서 '건설기능인 등급제에 따른 미장·방수·조적 공종의 중급 이상 기능인 보유'로 개정되는 식이다. 또 특급 이상의 기능인을 보유한

회사는 자본금 2분의 1의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도 내부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오성 LH 고객품질혁신담당장은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통해 기능인력 우대환경을 조성하고, 건설현장의 좋은 일자리 확산, 기능인력 교육·취업 연계를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40여개 현장으로 사업을 확대한 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협 강원도회, 2017 최고경영자 해외연수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본 돗토리현과 오사카 등을 방문해 '2017 최고경영자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일본 해외연수에는 역대 최대인 소속사 회원 60여명이 참가했다.

해외 연수단은 1994년부터 강원도와 우호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하고 있는 돗토리현청을 공식 방문해 노가와 사토시 돗토리현 부지사, 시모모토 야이치로 일본 돗

토리현 건설업협회 회장과 건담회를 열었다.

아울러 최근 포항 지진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는 내진 시설과 관련해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우수 사례들을 설명 듣고 시설물을 참관했다.

이 밖에도 연수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만다비'를 선물하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일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계약체결때 해결방법 명시 국가계약법 개정안 의결 발주처 중재거부 사라질듯

공공공사 계약분쟁의 조속한 해결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약예규로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 판결에 우선해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명시함에 따라 발주기관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거부가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분쟁이 있었지만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법 개정으로 그동안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꺼려하던 조정과 중재 절차를 활성화해 분쟁해결기간이 줄고 업계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에는 평균 2.7년과 410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된 반면 조정은 평균 50~60일과 감정·진단·시험이 있을 경우 실비, 중재는 평균 1.4년과 85만원(소가 2억원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는 또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설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고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면 처벌토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시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도입하는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채희찬기자 chc@